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포기할 듯

의원들간 찬반 엇갈려 오늘 총회서 결론 도입엔 의회도 요구... 논란 더욱 확산

광주시의회가 한 차례 포기했다가 1개월 만에 재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오전 비공개로 전체 의원 총회를 열고 유급보좌관제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유급보좌관제 예산편성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과 '시기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원들 간에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7일 오전 의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

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유급보좌관제 도입 여부는 이날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 의원 총회 시간이 짧아 충분한 토의를 하지 못해 7일 다시 의총을 갖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유급보좌관제 예산 증액 요구를 강행할 것인지, 한두 명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재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부분 의원들의 시각이 광역의회에 보좌관을 둘 수 없도록 한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 시·도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기회에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하지만, 상임위 예산 삭감이 유급보좌관제 예산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혹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대부분 찬성의견이 많았으나 일부에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공감하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민사회와 언론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1개월 만에 재추진하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난 5대 의회의 구태를 지적했던 현재 상당수 초선의원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5대 의회의 행태를 닮아가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만약 민주당 의원 2명이 유급보좌관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

로 찬성하면 민노당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정당이 되고, 반대로 민주당은 여론에 역행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담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는 광주시의회가 이 같은 정치적 부담을 지고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전남도의회도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편성을 전남도에 요구할 계획이어서 유급보좌관제 논란이 광주·전남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의정서포터즈 방식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좌관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오열하는 유가족 연평도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식이 사고 13일 만인 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됐다. 발인제를 마치고 인천가족공원 화장장으로 향하는 고인들의 관을 따르며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평도 피해회복에 정부 300억 긴급 지원

'서해5도 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회복을 위해 300억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해5도 전체의 생활여건 개선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서해5도지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이어 내년 중에 이들 지역의 생활 안정 방안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김왕식 국무총리는 6일 정부종합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평도 포격 도발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회견에서 "연평도 주민들이 하루속히 임시 주거지로 이전토록 하고, 주민의 생계안정과 자녀교육 지원에 힘을 쏟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지원 300억원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지원액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

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원, 특별취로사업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김 총리는 또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노후주택 개량, 농어민 소득 증대 방안 등을 담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것"이라며 "내년초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는 동시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1년 넘게 예산 집행 안하고 지방비 확보 못해 국고 '낮춤'

"전남도 방만한 예산 편성" 도의회 칼질 나선다

전남도의 허술하고 방만한 예산 편성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수억 원대의 사업예산을 편성해놓고 1년 넘게 집행하지 않는가 하면, 전체 사업비 중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사 기능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 등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말뚝인 천일염 '명품화' =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1년 전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친환경염전장개선사업'을 비롯,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한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천일염장개선사업(총 사업비 117억원)의 경우 국비 35억1000만원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비 편성이 절실하지만 전남도는 총 사업비의 10% 수준인 11억7000만원을 전혀 예산에 반영하

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염전 바닥에 깔려 있던 폴리염화비닐(PVC)을 걷어내고 옹기나 토관(갯벌을 다져 만든 바다) 등 친환경적 소재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남도가 '천일염 명품화 전략'을 내걸고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장 '천일염 경쟁력 강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지적 신안·영광·해남·무안 등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비 반납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도 자체 예산 67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시·군 부담만 가중시키는가 하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을 위해 확보해야 할 8억1000만원의 예산 중 2억3000만원을 책정하지 않았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말로만 '천일염 세계화·산업화'를 강조할 뿐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구호"라는 비

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단 받고 보자'식 편성, 타당성 분석도 미흡 =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09년 당시 첫 삼조차 뜨지 않은 수산물안정성 검사센터 장비구입비로 2009년 국비 10억원,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도비 10억원을 받아낸 뒤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내년으로 넘겼다.

건물 입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이지만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편성했다는 점에서 1년 가까이 쓰지 않은 예산을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회측 설명이다.

계구리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동물의 섬 조성 사업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F1, 도민에게만 떠넘길건가 = 도

의회는 일단,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평가와 함께 개최권료 및 추가 공사 부담, 부실한 공정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예산 편성은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명현관(해남1·민주) 의원은 "F1 대회 경주장 추가 건설비로 275억원을 책정했지만 경주장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 352억원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비로만 경주장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며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김옥기(나주2·민주) 의원은 "F1 조직위원회 중심으로 내년 F1 대회를 치르면서 운영비도 120억을 부담하는 등 운영비만 300억원이 들어가는 데다, 개최권료 과다 지급에 따른 협상 문제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개최권료로 180억원을 책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민주총추 전남본부 사무실 임차비용(2억원), 횡령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경상보조비(8000만원), 도립대 교수 성과금(4000만원),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운영 민간 위탁금(2억8000만원) 등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돼 조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게 도의회 분석이다.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軍, 서해 대청도 등 29곳서 12일까지 사격훈련

합동참모본부는 6일부터 12일까지 서해 대청도 등 29곳의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다.

서해는 서북도서 지역인 대청도 남서부를 비롯한 격렬비열도 남방, 안마도 남서방, 대천항 근해, 미여도 근해, 직도 근해, 안흥 남방, 어청도 서방, 흑산도 남서방, 초치도 북서방 등 16곳이다. 대청도 남서방에선 해군 함정이 남서쪽으로 사격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에서는 포항 동북방과 강릉 동방, 울릉도 근해, 울상 동방, 영일만 동방, 거진 동방, 기사문 동방 등 7곳이며 남해는 옥지도 남동방, 거제도 남동방, 남형제도 근해, 제주도 동방, 추자도 근해, 서귀포 근해 등 6곳에서 훈련이 이뤄진다. 그러나 연평도와 백령도 지역은 이번 훈련 구역에 포

함되지 않았다. 군은 연평도의 해상 사격훈련은 연평도의 전력증강 추이와 주민 안전문제, 해상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해상사격훈련 계획과 연내 연합훈련 추가 실시를 위한 한미간 협의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건의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병사의 복무기간(육군 기준)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또 지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병역의무 이행 유도 및 국민

평등 실현 차원에서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과제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국방개혁 과제를 선별, 정책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했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